포용적 복지국가로
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

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

2018. 01. 18

보건복지부

목 차

Ⅰ. 추진 여건
Ⅱ.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
Ⅲ.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
Ⅳ.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

Ⅰ. 추진 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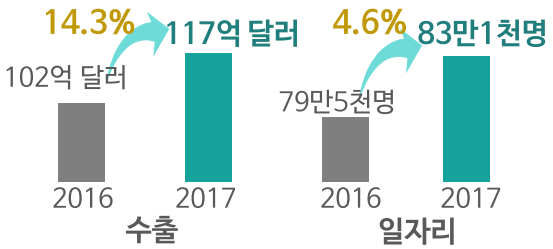
1. 보건복지 분야의 성과

현 정부 출범 100일 전후로
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
핵심 국정과제 집중 발표·추진

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

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로드맵 ('17.10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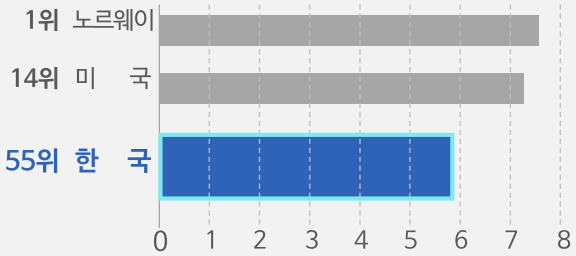
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 ('17. 12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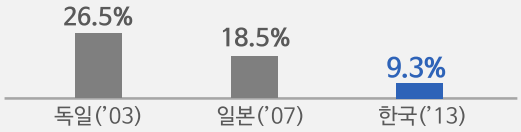
2. 아직 부족한 점

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,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 필요

〈OECD 국가 중 행복지수 하위권〉



〈공공사회 지출 비교〉



※ 독일은 '03년에, 일본은 '07년에 국민소득 3만불 달성

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빈곤층도 상당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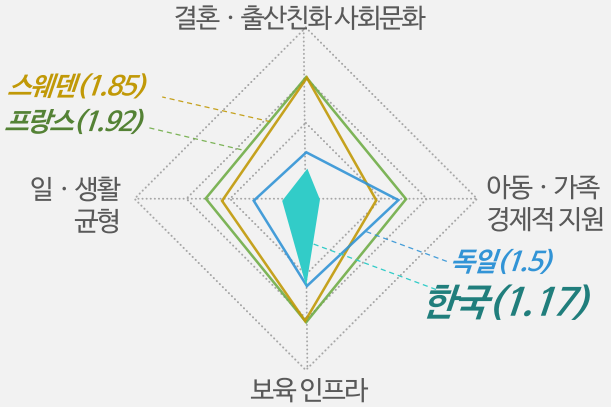
* 2017년 실태조사 결과

적정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한 공적연금

*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

일·생활 균형, 아동·가족에 대한 재정지출은 부족

보육지원 위주의 가족지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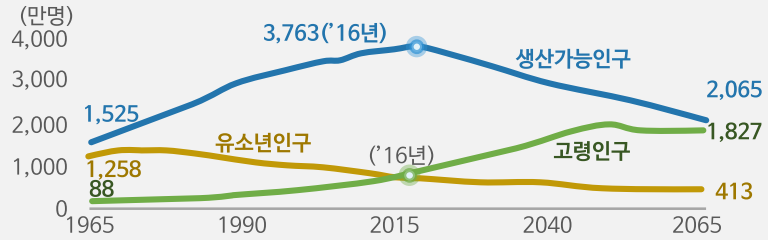
※ 저출산 대책 예산 중 보육 비중 : **한국 67%**, 프랑스 40%, 스웨덴 53%

3. 앞으로의 사회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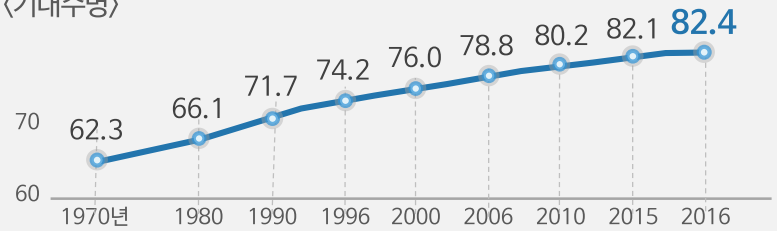
인구 변화

인구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
적정한 수준 설정, 질적 변화 불가피

〈인구변화〉



〈기대수명〉



생애주기별 근로형태의 변화

지금까지 평생직장

교육, 직업훈련 ➡ 취업 ⇄ 실업 / 가사 ➡ 재취업 ➡ 은퇴

건강한 고령인구 증가	빨라지는 기술변화	플랫폼 중심의 개인일자리

앞으로 평생고용

생애주기에 따라 '교육 훈련⇔취업',
'취업⇔실업' 등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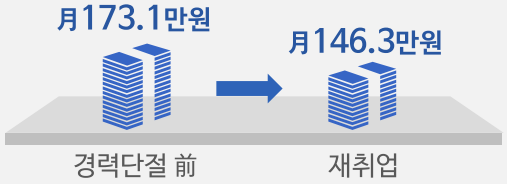
4. 3만불 시대, 사회안전망 혁신 필요

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, 연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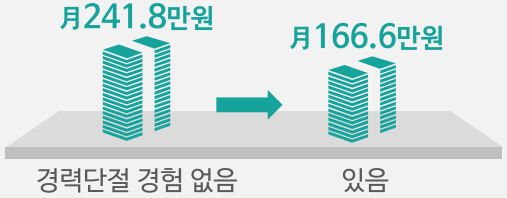
건강이 좋지 않아서	가족을 돌보기 위해
19.2% 50.2세	15.5% 39.6세
사업부진, 조업 중단, 휴·폐업	정년퇴직
31.0% 50.7세	8.0% 58.1세

*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고령층 부가조사

경력단절 전·후 임금



경력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



*2016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

경제·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변화가 필수적

5.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

복지 패러다임의 전환

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(경제보다 **후순위**로서 복지)

앞으로 **국가발전 전략**으로서 사람 중심의 사회안전망 (경제=복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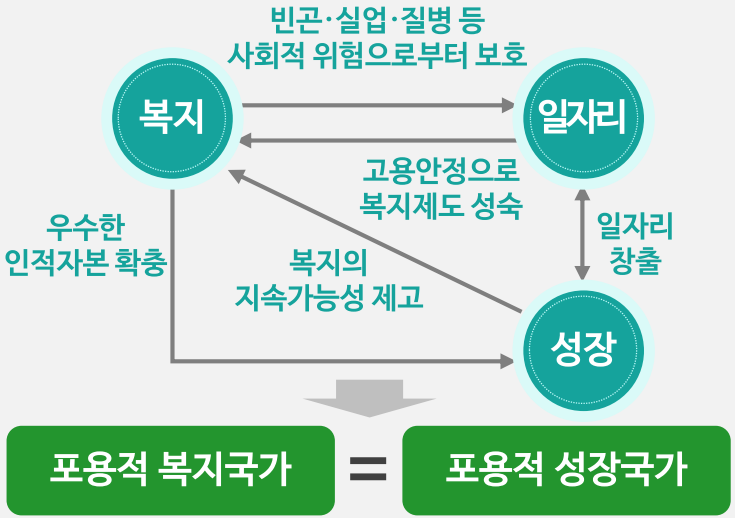
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

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**골고루** 누리고
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

개인이 인간으로서 **존중**받고
국가와 사회에 **기여**

포용적 성장(Inclusive Growth, OECD)

경제성장에 따른 **기회**가 국민 **각계각층**에게 주어지며,
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**공정하게 분배**



6.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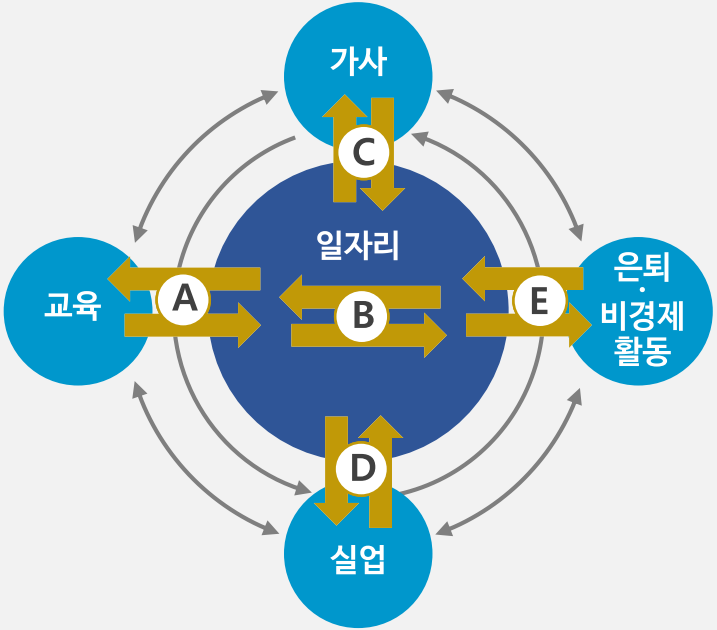
A
- **교육 ➡ 취업 : 보육, 아동건강투자, 아동수당,** 초·중등 교육, 교육-고용연계
- **고용 ➡ 교육** : 직업훈련

B
- **이직, 창업 등** : 직업훈련, 청년일자리 창출, 청년창업지원, **고령자창업지원, 의료보장**

C
- **고용 ➡ 가사** : 근로시간 단축, 시간선택제 일자리, 육아휴직, **양육 지원**
- **가사 ➡ 취업 : 보육, 장기요양서비스** 등 **돌봄서비스**, 경력단절 여성지원

D
- **고용 ➡ 실업** : 실업보험, **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**
- **실업 ➡ 취업** : 직업훈련 교육, 중고령자 취업지원, **자활지원, 의료보장**

E
- **고용 ➡ 은퇴, 비경제활동** : **국민연금, 기초연금**,주택연금 등 **장기요양서비스, 여가·문화,** 평생교육
- **은퇴, 비경제활동 ➡ 취업** : 고령자 고용, **노인·장애인일자리, 의료보장**



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
생애주기별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마련 필요

Ⅱ.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

1.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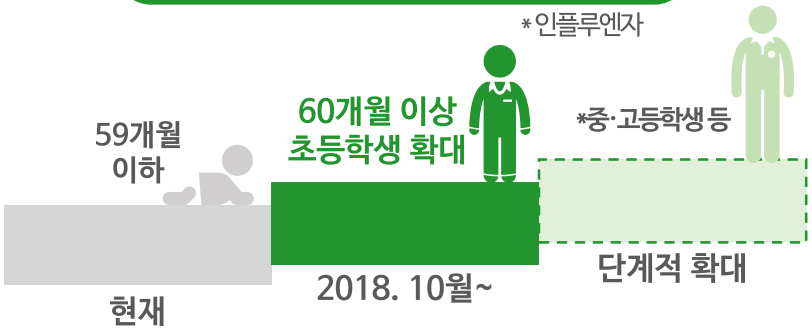
국정과제 48

아동수당 신규 도입

- **0~5세** 아동에게 월 **10만원** 지급
  (소득하위 90% 이하 약 238만명, 9월)
  - 대상자 수, 소득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6월부터 신청 준비

국정과제 4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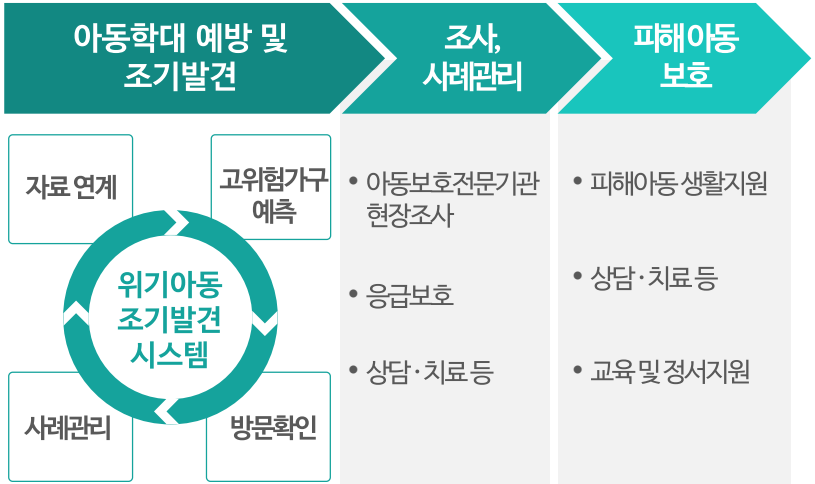
국가예방접종 강화



국정과제 48

아동학대 예방 강화

- **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** 전국 확대(3월)



2.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

국정과제 42

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

- **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**(10월)
- **생계급여 탈락자**에 대한 추가 보호 (연간 10만명)
  *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경우,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화

[생계 · 의료급여를 못 받은 빈곤층
93만명('15) ➡ 47만명 이하('22)]

- 적정 보장을 위해 **재산기준,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** 등 개선
  *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30%를 초과하는 가구는 94만명 추정

국정과제 42

자립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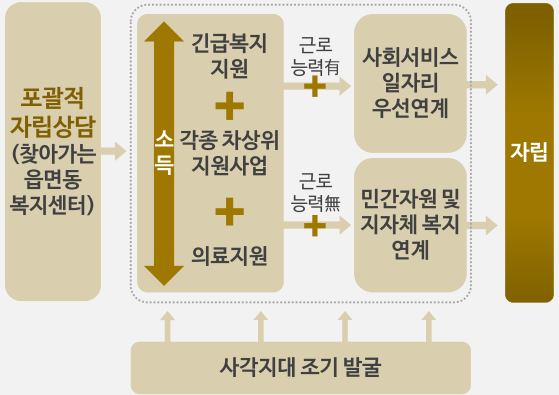
- **청년희망키움통장** 도입
  생계급여 수급 청년 (15~34세)

- **자활급여 인상**(8.2%), **자활일자리 1,500개** 추가
  ('17년 45천 ➡ '18년 46.5천개)
- **기초수급자**의 **사회보험료 공제** 확대
  (보험료의 50% ➡ 75%, 1월)
- **지역자활센터**를 **사회적 협동조합**으로 전환, **도시재생, 사회적 농업 육성** 등과 연계

국정과제 42

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

- **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체계화**를 위한 통합지원업무 지침 마련
  (17개 부처의 87개 사업, 하반기)



3. 편안한 노후를 지원

노후소득 보장 강화

국정과제 43

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(9월)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(10월)

- **소득보장 강화, 세대 간 형평성, 지속가능성**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**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** 개선 ➡ **75만명** 가입

노인 일자리

국정과제 43

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, 역량제고 프로그램 강화

- **노인일자리** 확대('17년 46.7만명 ➡ '18년 51.0만명)
-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등 **민간시장 고령자 고용 촉진**
- 베이비부머,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**사회공헌 일자리 유형 도입**

노인돌봄

국정과제 43

치매국가 책임제, 장기요양 서비스

- **치매진단 MRI 건강보험** 적용(1월)
- **경증치매 인지지원등급** 신설(1월)
- 양질의 **장기요양 서비스**
  - 통합재가급여(방문요양+간호+목욕), 사례관리 체계화

치매안심센터
(전국 256개소)

존엄한 죽음

국정과제 45

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

- **연명의료정보시스템** 구축 등 시행(2월)에 만전
- **호스피스 시범사업**(가정형 등)을 **확대**하고, **권역별 호스피스센터**('18.3개소) 등 추진기반 강화

4.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

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 '22년까지 34만개 창출

국정과제 17

- **국민체감, 지역 특화**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(예시 : 중독통합관리사)
- 복지시설 종사자 **연가 보장, 직무교육** 등에 필요한 **대체인력 지원, 근무여건 개선(예: 2교대 ➡ 3교대)**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

스마트 헬스케어 '22년까지 10만개 창출

국정과제 34

- **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** 플랫폼 구축 ('18~'20)
- **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**체계 구축방안 마련(6월)
- **로봇, 인공지능**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의 **신의료기술평가** 시범사업(하반기)
- **연구중심병원 R&D** ('18년 300억원)
  보건산업 혁신창업 지원센터 운영(2월)·펀드(6월) 신설
  ➡ 5년 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1천개
-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신설(7월, 중국)
  ➡ **의료·제약·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지원**

Ⅲ.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

1. 가정의 행복과 일·생활 균형

국정과제 48

보육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

- **국공립어린이집 확충(연간 450개소) ➡ '22년 공공보육이 40%를 차지**
  -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, 민간 매입 활성화 등 확충방식 다양화
  - 신축 지원단가를 인상(4.2억 ➡ 7.84억원), 지자체 보조율 차등화 등 균형 배치
- **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를 9.6% 인상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**(1월)
  -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 마련(하반기)

아동돌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

- **온종일 돌봄체계 구축**
  - 10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실시(3월)
  - 지자체 중심의 지역돌봄협의체 구축방안 마련(보건복지부 · 교육부 · 여성가족부 · 행정안전부 협업)

국정과제 48

저출산 패러다임 전환

기존 인프라 구축 등 **보육지원 중심** → 패러다임 전환 → **일·생활 균형,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**

2. 장애인 권익 신장

국정과제 42

장애 등급제 폐지('19.7월) 맞춤형서비스제공

- 일상생활능력, 인지특성, 주거환경 등 고려한 **종합판정도구 개발**(6월)
- **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**를 활용한 **전달체계 정비**(12월)
- **장애등급제 폐지**를 위한 실행 방안 마련(6월)
  47개 관계법령 정비(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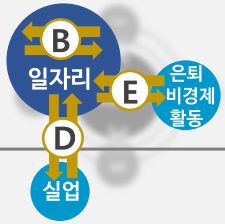
국정과제 42

장애인 건강증진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 구축

-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
  ➡ **합병증, 만성질환 관리**
- 건강검진기관(10개소) **지정**
  ➡ **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**
  ('22년 60%)
-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**건강관리, 진료, 재활, 임신·출산 지원**('21년까지 시·도 별로 확충)
-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, 장애아동 건강관리 의사 도입, 재활 수가 개선 등
  * (건립 착수) '18년 1개소, '19년 4개소, '20년 4개소

3.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
국정과제 44



국민부담이 큰 비급여 해소, 환자 본인부담 인하

1~2분기

- 선택진료 폐지
- 본인부담상한제 개선
-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
- 노인외래정액제 정률 구간 개선
-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, 간호인력 수급대책 발표
-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

3분기

- 2·3인실 상급병실 보험 적용
-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(50%→30%)
-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본사업 시행
- 뇌, 혈관 MRI 보험 적용

4분기

- 소아 충치치료 보험 적용 (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)
-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
- 보험료 인하 유도 등 **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**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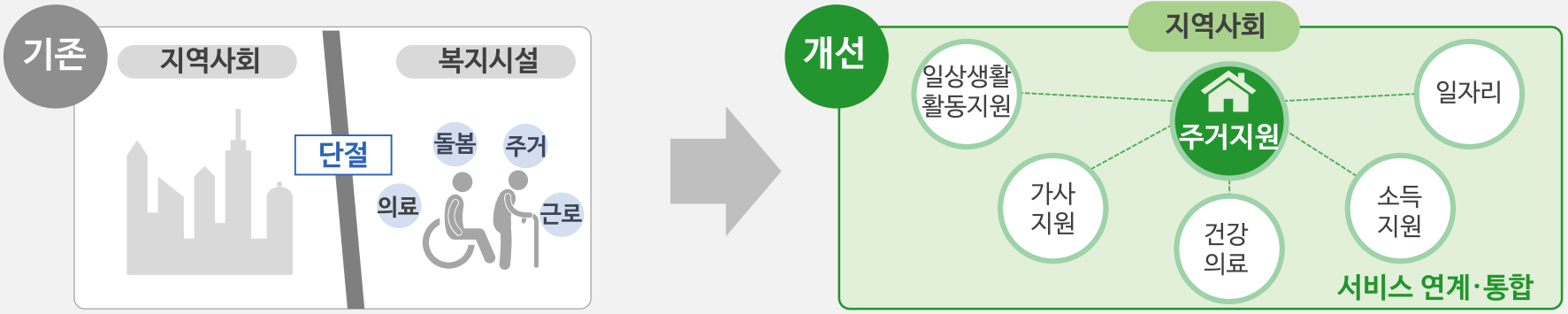
’19~’22

- MRI·초음파 등 급여화 지속 추진
- 1인실 상급병실 일부 보험 적용
-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지속 확대(’22년 10만 병상)

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(9월), **시행**(’19~’23)

Ⅳ.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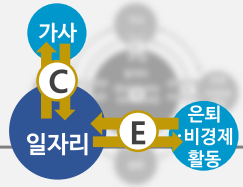
1. 사람 중심 보건복지정책



시설에 격리	시설 밖의 **지역사회**에서 **어울려 생활**
획일적 서비스	**다양한** 서비스 제공
인권 침해	**개인의 욕구, 수요**를 존중
대상자별 **분절적** 서비스	개별 특성을 반영한 **서비스 연계 · 통합**

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정책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지원

2.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(커뮤니티 케어)



장애인 탈시설화

- 거주시설 장애인의 **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** 방안 마련(11월)
- 탈시설 장애인에게 **공공임대주택 제공**('19~)
- **자립정착금** 지원 방안 검토

정신질환자 사회통합

- **중간집**(Halfway House) 시범사업 시행 · 모형 개발
  ➡ **사회복귀 지원**
- **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** 구축
  ➡ 지역사회 기반 **사례관리** 강화
- **절차보조인· 공공후견인** 제도 도입
  ➡ **의사결정 지원**으로 자립 강화

아동 지원 확대

- 시설보호 위주에서 **지역사회·가정보호** 중심으로 개편방안 마련('18)
  *아동복지시설 기능 개편, 입양체계 개편
- 심야 등 **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** 시범사업 추진('18)
- **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**(사례관리, 주거, 일자리 지원 등)

노인 의료 · 요양 · 치매

- **욕구, 신체상태, 돌봄 여건** 등 고려

의료 – 시설 돌봄 – 단기 돌봄 – 재가(在家) 서비스

- **치매안심센터**를 **거점**으로 상담, 가족지원, 서비스 연계 등 지원
- **통합재가급여**(방문요양+간호+목욕) 시범사업

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로드맵 마련(상반기)

3.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

건강관리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

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('18년)

현행	개선모형
• 금연 등 건강증진사업 • 방문건강관리사업 • 모자보건사업 • 의료비지원사업	• **영유아,여성, 노인, 만성질환자**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모형 개발 • 맞춤형 **건강상담·지원 및 방문서비스** 제공·연계·협력

보건소를 통한 통합적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('19년)

- **제공** : 신청사업 중심 → 맞춤형 플랜
- **대상** : 보건소 방문자 중심 → 찾아가는 서비스
- **연계** : 분절적 서비스 → 복지연계서비스

만성질환 동네의원 중심 관리체계 구축

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,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

〈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〉

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(상반기)· 확산

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('16~)
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('14~)
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('12~)
고혈압 · 당뇨 등록관리사업('07~)

→ **단계적 통합**

4.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기반 조성

국민 체감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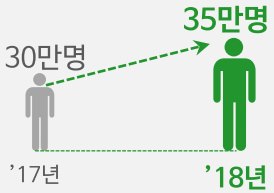
전담인력 확충

- **통합 사례관리 ·방문건강관리 강화**
- **전담 공무원 확충**
  - **사회복지** : 1.2만명 (~’22년)
  - **방문간호** : 3.5천명 (~’22년)

  * 아동복지 200여명, 치매전담 500여명
- **정신건강복지센터**(1.5천명) 등 서비스지원 **인력 확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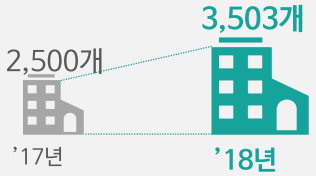
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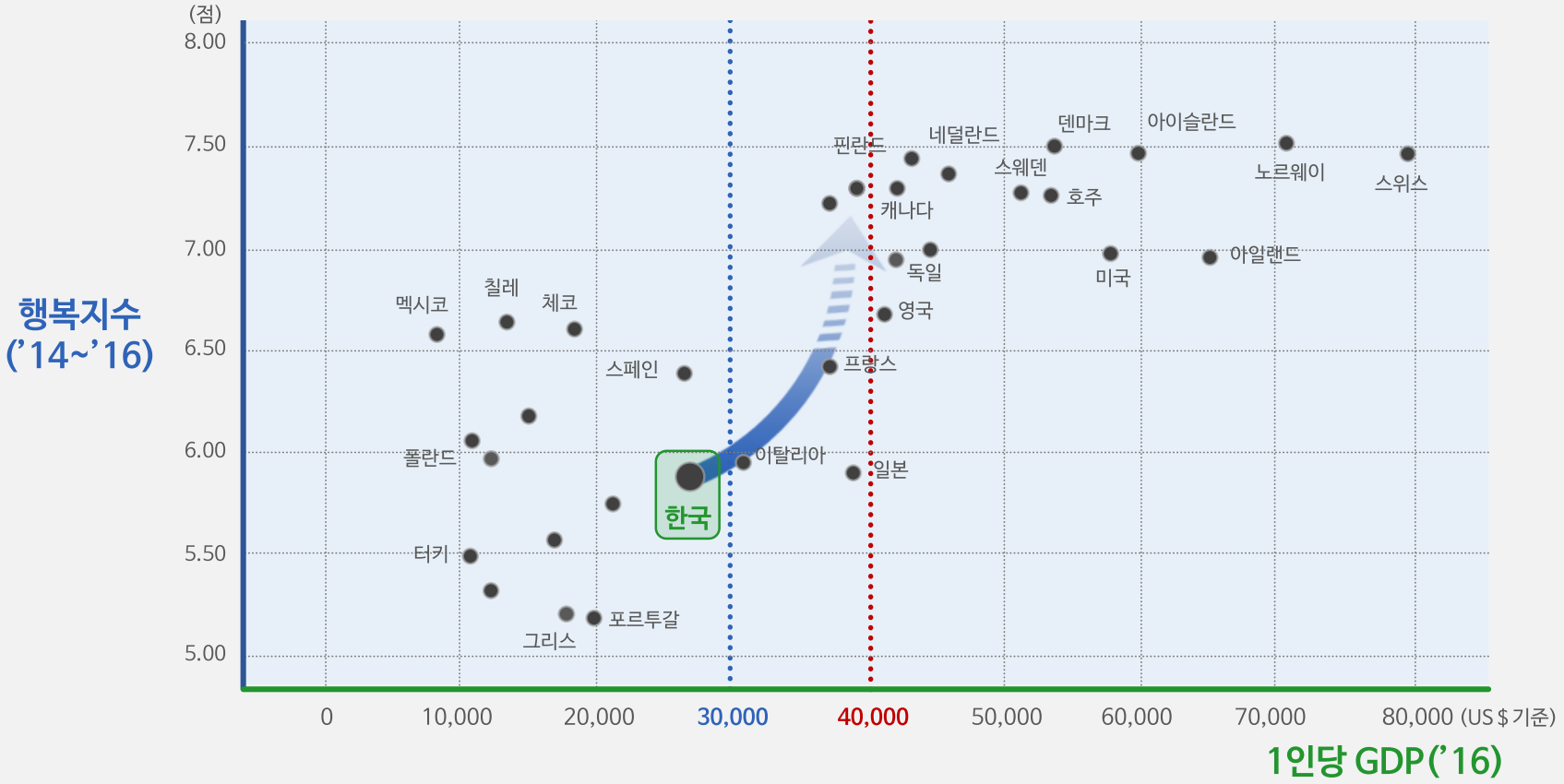
- **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** 정보를 적극 활용
- **실직, 질병, 빈곤 등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**



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

- **전국 읍면동 확대**



- **주민센터·보건소·사회복지관 등 공공·민간복지자원 연계**

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4만불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.